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재원

새누리당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배포일시

2013. 10. 20 (일)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419 호
전화 02)784-2820, 팩스 02)788-0153 (문의 : 김세중 보좌관 010-2039-1175)

원전은 줄여야 하는데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 54개 프로젝트는 인허가 때문에 수년간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어

산림청, 산림보호 명분으로 풍력발전은 나 몰라라

산림청 인허가 기준 애매모호

청장은 규제 완화 언급, 담당 부서는 요지부동, 풍력발전에 대한 산림청 의견 오락가락

부처 간 협업은 다른 나라 이야기, 산림청·산자부 의견 평행선만 지속

비싼 전기요금 물어야 하는 국민만 피해

원자력발전의 감소 계획으로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 수요 증가

발전허가가 난 54개 풍력발전사업 모두 인허가 문제로 교착상태¹⁾

향후 원전 비중을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최근 발표로 인해 향후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 전력원 마련의 일환으로 풍력발전의 조기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²⁾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허가가 난 54개 풍력발전프로젝트가 모두 인허가 때문에 수년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 내 풍력발전의

1)“느릿느릿 풍력산업”, 전기신문, 2013. 10. 14

2) 전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전력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려야 한다. 산업용이나 상업용 대비 가정용 전기의 소비 비중이 낮아서, 일반가정에 대한 전기료 인상과 에어컨이나 난방기기에 대한 사용 억제와 같은 가정용 전기의 수요억제책만으로는 전력난 해결이 어렵다. 수요관리가 어렵다면 전력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원자력을 줄일 경우 대안은 석탄과 LNG 또는 신재생에너지뿐이다. LNG 발전을 확대하기에는 원가가 많이 소요되어 한계가 있다. 전력공급원가가 LNG의 절반 값에 불과한 석탄발전을 늘리는 것도 우리나라가 유엔기후협약에 가입하여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발전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고, 신재생에너지 중 경제성이 입증된 육상풍력발전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풍력입지요건 대부분이 산림청 판단 사항으로 애매모호, 요건 구체화가 필요해
규제 위주 정책 때문에 국내에 풍력사업에 적합한 지역은 거의 없어

풍력발전을 위한 산지개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강화되고
있다.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정량적인 것은
“산지의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및 25도 이상 지역 40% 미만”밖에 없고 이
외에는 모든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림재해 발생이 우려되지 않
는 경우 등으로 인허가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풍력단지가 수치화된 경사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림청이 산림훼손 최소화나
산림재해 발생 우려 여부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사실 상 곤란한 실정이다.

1.8기가와트(Gigawatt) 규모의 54개 풍력발전프로젝트가 인·허가 단계에 묶
여 수년째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현실은 산림청의 풍력입지정책이 규제 위주로
흘러왔음을 반증한다. 대규모 풍력발전기를 높은 산 능선에 설치하는 풍력발전
의 특성 상, 지금처럼 산림이용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정책을 계속한다면, 풍력사
업에 적합한 지역이 국내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
다.

청장은 규제 완화 언급, 산림청 직원은 규제 개선 용역을 발주하고도 규제 개선
계획이 없다고 답변, 풍력발전입지 규제 개선 여부 오락가락

산림청은 지난 9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풍력발전과 관련하여
현재 준비 중인 규제개선 계획은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산림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재원 의원에게 규제개선 계획이 없다고 답

변하기 하루 전인 지난 9월 4일, 신원섭 산림청장이 황성 태기산 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하여 풍력발전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은 풍력발전시설 입지기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현장토론회에서 풍력발전산업과 산림분야가 윈윈(win win)할 수 있는 입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발언³⁾하였다. 산림청 공무원들이 청장과 따로국밥임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10월 18일 김재원 의원실에서 풍력발전입지규제 개선계획의 유무에 대해 산림청에 다시 질의하자, 산림청은 뒤늦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풍력 발전단지 설치에 따른 산지관리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연구사업설계서에 따르면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시작하였고 연구 협조기관은 산림청 산지관리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그동안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진행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산림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풍력 정책, 부처 간 협업은 다른 나라 이야기, 비싼 전기요금 물어야 하는 국민만 피해

육상풍력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정부 부처 간에 서로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 통해 발전사업자들의 신재생발전 의무를 매년 늘리고 있지만, 산림청(환경부)은 풍력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수차례에 걸쳐 부처 간 협업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풍력산업 육성을 이유로 발전허가를 내주고 있고, 산림청(환경부)은 산림(환경) 보호를 이유로 풍력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풍력발전이 청정에너지란 점에서 풍력발전에 대한 규제는 녹색(풍력발전확대) 대 녹색(산림환경 보호)의 충돌로 불려진다. 녹색과 녹색의 충돌에서 풍력발전

3) "신재생에너지로서 육상풍력 발전단지의 입지 필요성과 장기간에 걸친 풍력발전단지 입지 검토에 따른 업계의 불만, 그리고 불투명한 환경·산림관련 규제 등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검토해 풍력산업의 발전과 산림 내 훼손·재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지기준을 만들어 산림분야와 풍력발전산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출처 :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

소 설치로 인한 산림대체효과가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림대체효과보다 더 크지만, 정부 부처 간 협력이 잘 안 되어 애꿎은 국민과 사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산림과 풍력발전이 윈윈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 시급

산림청장의 언급처럼 산림분야와 풍력발전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풍력입지기준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풍력발전입지 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산림도 보호하고 발전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김재원 의원은 “전 국토의 64%가 산지인데, 주민의 반대가 없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산지에 한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청정에너지원인 풍력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라면서, 산림청에 풍력입지기준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끝.